

대혁신호남포럼 창립총회 23일 개최

호남 광역지자체장 등 참석... 호남의 미래 논의 경제동맹 구축·하계올림픽 유치 '주요 과제' 창립 총회 후 尹 탄핵 촉구 퍼포먼스도 예정돼

『대혁신호남포럼』이 23일 오후 2시 나주 종합스포츠타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창립총회를 연다. 이 창립총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호남을 대표하는 인사

들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해 호남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호남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을 목표로 창립됐다. 호남 3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간 협력과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호남권 경제동맹 구축과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이 환영사를, 홍영기 호남학진흥원장이 '정의와 개혁, 호남 정신'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또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각각 '호남 대혁신'을 위한 기조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은 향후 호남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호남의 목소리 전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함께 향후 광주, 전북으로부터 추가 임원을 추천받아 호남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의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포럼의 공동대표로는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박기영 국립순천대학교 명예교수,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여하며, 고문과 자문위원으로는 여러 호남 출신 저명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포럼 창립 총회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단식 투쟁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최서연 상임위원 병원 긴급 이송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최서연 상임위원(전주시의원)이 단식 10일째인 20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최 상임위원은 지난 11일부터 전북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주장하며 단식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경 심한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하며 급격한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전주시 우석대 한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한편, 방용승 전국공동총상임대표, 조지훈 전북공동대표, 이우규 진안상임대표, 김진명 임실공동대표 등 4명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을 주제로 한 탄소중립 1차 기획포럼이 열린 가운데, 한정수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 모색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위 1차 기획포럼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을 주제로 한 탄소중립 1차 기획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JBS 탄소중립 포럼에서 주최하고,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특위 위원, 전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한정수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주제발표로는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과 한순옥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이 각 탄소중립 재정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및 '탄소중립과 예산운용'을 주제로 기후대응기금 운용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좌장인 한정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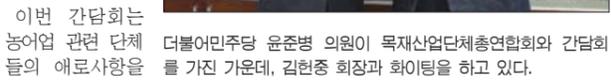
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라영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부센터장, 서안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토론회자로 참여해 전북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 활용 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정수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구체적인 예산 배분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전북의 탄소중립 정책과 예산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내 목재산업 내실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민주 윤준병 의원,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 일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목재산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업 관련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기획한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여권협회와의 간담회,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의 간담회 등 전담 의원으로서 소관 농어업 단체와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현중 회장 등은 윤준병 의원에게 연합회의 당면현안 문제들을 공유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김현중 회장과 화이팅을 하고 있다.

먼저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목재의 날 제정에 대한 입법을 건의했다. 세계 목재의 날이 매년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되어 목재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목재의 효능성을 홍보하고 목조건축, 국산목재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목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의 날, 건축의 날, 임업인의 날, 농업인의 날 등 다양한 분야가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있다. 김 회장은 목재산업 전반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가목재건축센터'의 설치, 목재시공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목구조시공업'의 공사 업종 신설,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의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의 확대 개편을 각각 요청했다. 현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의 이용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을 뿐 목재산업과 관련된 사업은 그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해 근거법을 개정해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해 역할을 확대하고, 10명보다 불과한 진흥회의 규모도 지금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윤준병 의원에게 전달했다. 윤준병 의원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잘 해결해 업계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인력 수급 곤란으로 인해 떨어뜨리는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목재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목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尹 파면으로 국가 위기 종식시켜야" 민주 도당, "尹정권이 도모 친위 쿠데타, 민생 파탄 초래" 국회의원 향한 계란 투척과 관련 "명백한 폭력이자 테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20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해 국가 위기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슬지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마비되고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권이 도모한 친위 쿠데타는 국경 추락과 민생 파탄을 초래한 최악의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회의원을 향한 계란 투척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명백한 폭

력이며 테러"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헌법재판소가 국가 실종 위기를 끝낼 변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슬지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마비되고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권이 도모한 친위 쿠데타는 국경 추락과 민생 파탄을 초래한 최악의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회의원을 향한 계란 투척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명백한 폭

"정부·여당, 농업 민생 외면"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 "농업 민생 4법 재추진하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이 내란수괴 보호에만 몰두한 채 농업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우농가 지원법 등 주요 농업 민생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과 농식품부가 불참하면서 심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반헌법적 발언 논란을 덮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난 1월 농업 민생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법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도 2개월째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농업 민생 4법을 재추진하고,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원 이 법안 심사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림·서상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의원이다. /이만호 기자

농가 경영부담 완화·농촌 인구 유입 촉진 민주 이원택 의원, 조세특례·지방세특례제한 개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농가 경영부담을 줄이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농업 생산비와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농촌 소멸 위

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업·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 △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지방세 개정안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을 조성해 농업·임업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치유관광산업육성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 김윤덕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자연유산법 등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지갑)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월에 이어 연속적인 입법 성공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로 통과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은 전북과 강원을 포함해 치유관광지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법적으로 처음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 해 전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치유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게임 업데이트와 신규 콘텐츠 출시가 빨라지고, 게임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자연유산법'은 독도 서도를 포함한 자연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출입 허가 사유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독도와 같은 천연보유구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다류펜터리 제작 등 활용 가능성이 열렸다. 김윤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기일이 가까워지며, 많은 국민들이 애타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입법성과 소식을 전달드리면서도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정국에 통과된 3건의 법안이 국민분들의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익기 기자

